

1. 들어가면서

한국은 '산 좋고 물 맑은'이란 말을 전국 어디나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나라였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부르며 이 땅의 아름다움을 자랑해 왔으나 7,8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극심한 환경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1990년 이후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환경운동이 태동하게 되고 특히 1996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Ramsar COP6)에 습지 관련 NGO들이 참가하면서 한국의 습지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된다. 이후 7, 8차 당사국 총회에 NGO들이 계속해 참가하면서 외국의 습지운동을 접하면서 국제 연대를 형성해 가고, 국내적으로는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보전운동,

논단

2

River & Culture



박 중 록 | 부산대 명예교사
습지와세물의친구 운영위원장
(greennd@hanmail.net)

NGO의 시각으로 살펴본 한국 정부의 Ramsar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최 준비

새만금 갯벌 매립과 낙동강하구 개발 반대운동을 거치면서 한국의 습지보전 운동은 짧은 기간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특히 한국 습지의 열악한 보전상태와 습지보전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NGO를 중심으로 Ramsar 총회를 유치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정부가 협력하면서 2005년 우간다에서 개최된 COP9에서 COP10의 한국 유치가 결정되어 오는 10월 그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COP10 유치 이후에도 NGO들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의 습지보전상태와 보전정책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세계인의 우려와 관심을 외면한 채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호주 물새 이동 경로상 가장 중요한 서식지의 하나인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기 시작했으며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대형 다리건설을 허가함으로써 습지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6년 이래 중단되었던 대규모 연안매립을 지난 7월 다시 허가하는 등 국제적으

로 중요한 습지 파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발전을 지상목표로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축소하는 등 그동안 마련된 최소한의 환경규제의 축소는 물론 대운하 추진 등을 통해 온 국토를 다시 개발의 시대의 삽날 아래로 몰아가고 있다.

Ramsar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국가로서 Ramsar 협약의 모범적 이행을 통한 성공 개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습지를 계속해 파괴하면서 말로만 성공적 Ramsar 총회 개최를 외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총회 개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COP10 유치를 통해 한국 습지보전운동의 획기적 전환을 기했던 NGO들의 부족한 노력도 마땅히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환경올림픽 개최를 통한 친환경 선진국가로의 국위선양 운운하는 형식상의 성공적인 회의 개최 외에 국제사회에 선보일 아무런 내용도 준비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준비상황은 뜻있는 이들의 큰 우려를 자

아내고 있다. Ramsar 총회 개최국이 총회 유치 이후에도 전혀 습지보전정책과 보전실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이 알게 될 때 과연 한국 정부가 이 총회 개최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국제 사회에서 경제 분야를 넘어 환경 전 분야의 외교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가 개선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습지파괴국가, 환경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회이나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우려하는지를 첫째, COP10 유치 이후 한국 정부의 습지보전 실태와 그 정책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COP10 개최 전략을 NGO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Ramsar COP10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미리 밝히건 데 필자는 결코 전문습지운동가가 아니며 이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습지관련 전문운동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비록 아마추어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으나 필자 또한 습지보전운동에 몸담고 있고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숙제처럼 이 글을 떠맡게 되었다. 이런 한계로 이 글은 깊이 있고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내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고 그 내용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소위 전문가 제위 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차 없는 질책과 지적을 요청 드린다.

2. COP10 유치 이후 한국 정부의 습지보전 실태와 정책

Ramsar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COP10 유치 이후에도 습지보전 실태와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별다른 게 기울이지 않았다.

2.1 2005년 COP9에서 COP10의 한국 개최가 결정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파괴를

계속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로

- 새만금 갯벌 매립
-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과
- 주요 연안습지의 매립 승인을 들 수 있다.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 도요물떼새의 이동경로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갯벌로 이곳의 매립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곳의 도요물떼새 도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새만금 갯벌 매립은 한국의 습지보전 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낙동강하구는 1966년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으로 지정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다. 습지보호법 등 5개 법으로 중복 지정하여 이곳을 보호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2005년 중심부를 관통하는 대형 다리건설을 승인하여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발 활동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으며, 지금도 매립과 신공항건설을 포함한 10여개의 대형 개발 사업을 진행 혹은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지어는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8일 중앙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동 갈사만, 신안 압해도, 낙동강하구 놀차만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를 포함한 24개소의 연안 매립 계획을 승인하였다. 특히 Ramsar 총회 개최지인 경남은 가장 적극적인 매립 사업을 추진하여 경남지역 NGO들이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Ramsar 총회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다.

2006년 3월 발행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 갯벌은 '1964년 그 면적이 3천905km²이었으나 2006년 2천km²로 줄게 되고, 2015년에는 1천500km² 이하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06년 3월 30일 연합뉴스 김성용), 갯벌 매립과 간

척 등으로 국토면적은 1970년 98,534.48km²에서 2007년 100,032.39km²로 1,487.91km²가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국토면적 변화표

연도	국토 면적(km ²)
1970	98,534.48
1980	99,304.34
1990	99,585.70
2000	99,772.74
2001	99,850.00
2002	99,897.20
2003	99,912.87
2004	99,929.38
2005	99,958.16
2006	99,990.12
2007	100,032.39
(접경지역 312km 포함)	

출처: 국가통계 forum (www.kosis.kr)
 접경지역: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면적

2.2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에 소홀하였다.

가) 낮 뜨거운 Ramsar 습지 등록

Ramsar 등록 습지의 수와 면적은 그 나라의 습지보전 실태, Ramsar 협약의 이행정도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형상 한국의 Ramsar 등록 습지는 COP10 유치 이후 5개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에 비해 여전히 그 수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면적과 등록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 등을 살펴보면, 한국의 Ramsar 등록 습지는 한국 정부의 열악한 습지보전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① 물새들의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거의 모두 제외되어 있다.

Ramsar 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들의 서식처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전을 위한 협약이다. 물새들이 습지생태계의 지표종으로 가능하기에 물새를 통해 그 습지의 건강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많은 조류가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가며 살아가기에 이동성 물새의 보호를 위한 물새들의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내 습지의 Ramsar 습지 등록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Ramsar 등록 습지는 새만금 갯벌과 낙동강하구, 한강하구, 금강하구와 같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습지는 모두 제외되어 있다. 낙동강하구와 한강하구, 금강하구는 한국 정부 스스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UNDP/GEF 국가습지사업단에서 시범지역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어느 습지를 어떤 기준으로 Ramsar 습지로 등록할 것인지 하는 국가차원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②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한국의 Ramsar 등록 습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08년 5월 19일 기준으로 전 세계 158개 국가가 Ramsar 협약에 가입하였고, 등록된 Ramsar 습지의 수는 1,743개소로 그 면적은 161,177,358ha에 이른다. 가입국 평균 11.03개소의 Ramsar 습지를 가지고 있으며, 1개소 평균 면적은 92,471ha에 이른다. 한국은 8개소에 1개소 평균 1,015ha의 면적을 지니고 있어 그 수도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면적은 다른 나라의 1/90에도 미치지 못한다(표 2 참조).

〈표 2〉 Ramsar 협약 가입국 평균 Ramsar 습지 등록 현황

등록습지	수	면적(ha)	1개소 평균 면적(ha)
가입국 평균	11.03	1,020,109	92,471
한국	8	8,120	1,015

* 158개국 가입/ 등록 습지 1,743개소/ 등록 면적 161,177,358ha
 (2008년 5월 19일 기준 Ramsar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이는 당사국 총회(COP)를 개최하는 나라들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Ramsar 등록 습지 수와 면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표 3, 4 참조).

〈표 3〉 Ramsar 협약 당사국 총회(COP) 개최국 평균 Ramsar 습지 등록 현황

등록습지	수	면적(ha)	1개소 평균 면적(ha)
개최국 평균	36.6	2,511,426	68,701
한국	8	8,120	1,015

〈표 4〉 Ramsar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의 Ramsar 습지 등록 현황

	개최국	등록 수	등록 면적 (ha)	비고
COP1	이태리	50	59,796	
COP2	네덜란드	49	818,908	41,528km/ 1,600만
COP3	캐나다	37	13,066,675	
COP4	스위스	11	8,676	41,293km/ 730만
COP5	일본	33	130,293	
COP6	오스트레일리아	64	7,371,873	
COP7	코스타리카	11	510,050	51,100km/ 346만
COP8	스페인	63	281,768	
COP9	우간다	11	354,803	
COP10	한국	?	?	
		329	22,602,842	국토면적/ 인구

당사국 총회 개최국 중 캐나다는 회의 전 17개소(1천만ha), 회의를 통해 11개소를 추가 등록하였으며, 스위스는 6개소 지정을 제안하였고, 일본 5개소, 호주 7개소를 등록하여 당사국 총회 개최국가로서의 협약 준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습지운동에 관여하는 사람조차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 습지 2곳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나) Ramsar 협약 및 총회 결의안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습지보전 정책은 여전히 Ramsar 협약 및 총회 권고문과 결의안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 역시 형식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로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호주 물새서식처 네트워크에 동진강하구 1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동진강하구는 새만금 갯벌 매립 지역에 포함되는 곳으로 도요물떼새의 이동경로상에 위치하여 중간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의 갯벌은 사실상 한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Ramsar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철새(물새)와 서식처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과 관련해 〈권고문 4-12〉 이동성 생물종의 관리를

위한 당사국 간의 협력을 시작으로 〈권고문 5-1〉 특정 당사국 지역 내에서의 Ramsar 등록 습지, “동아시아 철새 이동로에 위치한 당사국들은 종 다양성의 가치, 어로활동과 더불어 이동 철새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조건대 습지의 추가적인 Ramsar 등록을 요청함”과 〈결의문 6-4〉는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로 상의 물새 중심의 습지 네트워크 구성 결의(96년 호주 브리즈번), 〈결의문 7-3〉은 이러한 노력을 아시아-태평양 물새 보존 전략 1996-2000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결의문 8-37〉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철새(물새)와 서식처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는 “철새 이동로 상의 당사국의 협력 필요, 아시아-태평양 철새(물새) 보존전략 2001-2005의 실행을 위한 위원회에 당사국들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으나 한국은 가입 당시 1개소를 지정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Ramsar 협약의 주요 결의문과 권고문의 내용 역시 번역 소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3 한국 정부의 유명무실한 습지보전정책

가) 알맹이 없는 습지보전법

1999년 습지보전법이 시행되었지만 습지보전법은 여전히 습지를 보전하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습지 보호지역 개발의 공익성 판단을 정부(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에 맡겨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상태다. 예로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은 공익상,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가하고 습지 보호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이 허가되었다. 습지보호지역 내 최초 대형개발사업인 명지대교 건설사업의 승인은 전국의 어느 지역도 개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실행력 없는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법에 의해 수립된 습지보전기본계획 역시 이의 실천에 필요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의무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강제 수단이 없는 근본

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과 보전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습지보호에 대한 평가조항 또한 갖추지 않아 습지보호에 필요한 실행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나마도 보호지역에 지정된 습지에 적용되며 나머지 대부분의 습지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다)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평가 제도의 축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시행자에 의해 선정된 연구자 혹은 기업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단계에서 멸종위기종 등이 발견되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는 게 현실이다. 예로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 예정지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매, 재두루미, 잣빛개구리매, 쇠부엉이 등의 서식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밝혀졌지만 공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방편으로 5천㎡ 이하의 공장 건설에 대해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고 실시계획 때 통과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예로 15만㎡ 미만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만, 그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도록 변경하는 등 환경파괴 위험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축소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유명무실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와 설치와 위원회의 통폐합

2007년 12월 한국 정부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를 Ramsar 사무국에 한국 정부가 COP9 이후 이룬 성과의 하나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이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마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철폐의 한 방편으로 오는

12월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다.

마) 부실한 국가습지관리체계

① 아직 한국 정부는 체계적인 습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로 습지의 관리 주체가 연안습지는 국토해양부, 내륙습지는 환경부가, 하구습지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낙동강하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습지보호법 등 5개법으로 중복지정하여 보호를 받는 지역이나 그 관리는 문화재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사하구청, 해양경찰 등에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형편이다.

② Ramsar 협약의 경우 국내 책임 기관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이나 국내 담당관은 환경부 환경전략실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과에서 맡고 있으며, 기술자문위원회 국내담당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맡는 등 Ramsar 관련 전담부서가 없다. 또한 대중인식증진 교육(CEPA) 관련 담당관은 정식 정부기관이 아닌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과 협력 체계 역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3. 한국 정부의 Ramsar COP10 개최 준비

한국 정부는 무난한 회의개최를 COP10의 성공 개최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당사국 총회 개최국가로서 당사국의 모범이 될 만한 내용상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OP10 개최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한국 정부가 COP1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하고 있는 노력은 Ramsar 협약이 추구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습지보전정책을 선진적으로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아니라 행사를 탈 없이 치르면서 최대한의 선전효과를 챙기겠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한국과 일본 NGO가 COP9에서부터 준비해온 논습지결의안 상정이 유일한 습지보전과 관련된 내용상의 노력이며, 그 외

는 동아시아 Ramsar 센터 설립을 승인받고 창원선언을 발표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내용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정부 내에서는 기회가 닿은 대로 한반도 운하건설 추진을 거론하고 있고, 개최지인 경상남도는 가장 앞장서 연안 매립을 추진하는 등 반람사르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국 NGO들은 Ramsar 총회의 거부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4. 성공적 Ramsar COP10 개최를 위한 제언

2008년 대한민국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0차 Ramsar 협약 당사국 총회를 50일 남겨 두고 람사르총회 준비기획단이 발행한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서는 COP10의 기대효과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환경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 기술하고 있다. 과연 COP10이 한국 정부의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형식상의 성공적 회의 개최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용적으로도 성공하는 총회 개최 가능성은 참으로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여 오히려 열악한 한국의 습지보전 실태와 정책을 세계에 드러내어 국제적인 창피를 자초하는 남사스러운 회의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 수준의 Ramsar 습지 등록과 Ramsar 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습지정책의 개선, 연안 매립과 한반도 대운하추진의 중지 등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여 형식적인 성공개최를 넘어 내용적으로 전 세계인의 박수를 받는 진정 성공한 COP10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대목서 아프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내 습지운동 NGO의 전문성과 저변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 습지운동 NGO는 일찍 Ramsar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연대 등을 통해 Ramsar COP10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진작 유치 후 이를 한국 습지보전 실태와 정책의 변화로 이끌

지 못하였다. 세계인의 이목이 한국 습지에 집중되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고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조그마한 변화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NGO의 활동은 한국 습지운동 NGO의 열악한 현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아픈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시민운동진영은 지금의 기회를 개발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를 최소한이나마 진정시키고 이 사회를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돌리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Ramsar 총회의 형식적 개최는 한국 정부에게도, 습지운동 NGO에게도 모두 불행한 일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습지운동에 관여하는 NGO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최소한의 습지보전실태 개선을 합의하고 이를 다음 달 개최되는 Ramsar 총회를 통해 온 세계에 알림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성공하는 Ramsar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Ramsar가 추구하는 현명한 이용을 택할 가능성은 있는지, 정부와 NGO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Ramsar 총회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